



“행정체제 문제점 분석 소홀... 용역 중단해야”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 제416회 임시회 3차회의 “지표 설정 논란·정부 설득 논리도 부족” 등 지적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연구용역에 대한 중단의 목소리가 제주도의회에서 나왔다. 특히 해당 연구용역의 지표 설정 논란과 함께 정부 설득 논리가 부족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의견이 이어지고 있어 용역 추진 방향이 수정될지 주목된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철남)는 15일 제416회 임시회 중 제3차 회의를 열고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연구용역 추진에 따른 현안업무 보고 등을 받았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현 행정체제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행정시 권한 약화, 풀뿌리 민주주의 퇴행, 지역간 불균형 심화 등에 대한 인과관계 분석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쏟아냈다.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용역은 지난달 26일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대상 제1차 중간보고회를 개최했으며, 현재 제1차 도민경청회 및 숙의토론을 위한 도

민참여단 구성을 완료한 상황이다.

특히 제1차 중간보고서에는 특별자치도 성과평가 및 행정체제 성과평가와 함께 도민과 공무원 인식조사도 실시됐는데, 이에 대해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1·이도1·건입동)은 행정체제 성과평가의 경우 현재 제주도민이 느끼는 행정민주성 및 주민참여 약화, 지역간 불균형 발생,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 등 문제점이 자치권이 없는 행정시 체제로 인한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인과관계 분석은 전무하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한 의원은 “인과관계 분석을 강조한 이유는 궁극적으로 현재 제주도민이 갖는 불편과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궁극적인 방법은 ‘행정체제의 개편’이라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분석 결과를 토대로 중앙정부를 설득할 논리를 만들어야 함에도, 연구적 한계가 있다는 연구용역진의 의견에 과업발주처인 제주도정이 동조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5일 제416회 임시회 중 제3차 회의를 열고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연구용역 추진에 따른 현안 업무 등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그러면서 한 의원은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연구용역진이 제대로 실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과업발주처인 제주도정이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절차의 진행에만 급급한 실정”이라며 “과업을 중단하고 인과관계 분석을 포함해 성과평가 분석이 재실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도2동 을)도 “해당 연구용역 보고서에 현 체제에 대한 문제는 물론 논리적으로 정부를 설득하려면 수치를 포함한 데이터, 정량적인 평가도 당연히 들어가야 한다”며 “그때

야만 우리가 논리로서 정부를 설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연구용역을 수행한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원은 “정량평가뿐만 아니라 정성평가, 인식조사도 포함하여 행정체제 성과를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객관성은 도민들의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에서 확보해 나갈 것이다”라고 답했다.

더불어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도 “정량평가는 상대적인 시각의 문제이며, 사회과학에서 정량평가를 객관적으로 하는 것은 쉽지 않다”면서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인칼럼에서

4·3의 ‘정명(正名)’은 국가의 책무다

4·3의 아픈 상처가 아물기에는 75년이라는 시간도 모자란 듯하다. 시간도 시간이지만, 4·3의 역사적 진실을 밝히고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우리의 노력과는 상반된, 불미스러운 ‘왜곡’과 ‘편향’이 반복되며 제주공동체의 상처에 더 큰 상처를 더하고 있는 지금이다. 역사의 아픔을 딛고 화해와 상생의 미래로 나아가고 있는 있으나 아직 4·3의 해결은 불완전하고 완결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현길호 제주자치도의회의원

그런 의미에서 4·3은 현재진행형이다. 4·3은 아직, 명확하게 제대로 정의되지 않았다. 2000년 제정된 4·3특별법은 당시까지 규명된 진상을 바탕으로 법

불미스런 4·3 왜곡·편향 반복

4·3특별법도 최소한의 정의

정명(正名)으로 바로 세워야

적으로 합의된 그야말로 ‘최소한의 정의(定義)’에 불과하다. 4·3의 정의(正義)롭고 완전한 해결은 결국 4·3당시 미군정과 대한민국 정부의 책임을 밝히는 과정에서 4·3의 역사를 제대로 정의(定義)하는 ‘정명(正名)’뿐이다.

국가법령인 4·3특별법은 2000년 제정 이후 2021년 전부개정되기 전까지 ‘국가의 책무’ 조항 자체가 없었다. 다행히 2021년 3월 ‘국가의 책무’ 조항이 신설되었다.

‘4·3특별법’ 제4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고,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한 가해자에 대하여 적절한 화해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국민화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국가의 책무가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한 가해자에 대한 화해 조치, 국민화합, 이 세 가지 뿐이라는 점이다. 어찌 4·3에 대한 국가의 책무가 희생자와 가해자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와 ‘화해조치’, 그리고 ‘국민화합’이라는 목적에만 치중해 있을까. 4·3특별법의 진정한 목적이자 본질인 진상규명의 책임이 국가가 외면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은 필자만의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4·3을 향한 국가의 관점과 노력에,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국가의 책무에 ‘진상규명’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4·3의 역사를 왜곡하고 조롱하는 일은 앞으로 계속 되풀이 될 것이다. 현수막을 걸어도 반박될 것이다. 처벌을 강화하든 마찬가지일 것이다.

불미스런 왜곡과 편향보다 더 이상 4·3의 역사를 흔들지 못하게 하는 일,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더 이상 훼손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일, 그래서 제주공동체의 상처를 더 이상 아프지 않게 하는 일은 국가가 미군정과 대한민국의 책임에 관한 진상규명의 사명을 ‘국가의 책무’로 할 때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4·3진상규명의 책무가 국가에 부여되어야만, 우리는 4·3의 올바른 이름을 가질 수 있다.

왜곡되고 편향되지 않을 역사,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대한민국 4·3의 역사를 우리 미래세대에게 전승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국가의 책무다.

총선 앞 당무감사 나선 민주당 지역여론 청취

제주시 3곳 이달 20일까지 진행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공천 심사 과정의 평가 지표로 활용될 수 있는 당무 감사에 돌입했다.

15일 민주당 제주도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당무감사는 제주시 3개 지역위원회를 대상으로 11~20일 사이 진행된다. 민주당은 이번엔 전국 253곳 지역위원회 중 사고지역 1곳 및 위원장 사퇴지역 5곳을 제외한 247곳을 대상으로 당무감사에 나서고 있다. 17개 시·도당에 대한 당무감사도 예정돼 있다.

이미 당무감사를 앞두고 중앙당 차원에서는 지역 정치권의 분위기를 파악하기 위한 여론청취를 해왔다.

이번 당무감사는 20대 국회 때인 2019년 이후 처음으로 4년 만이다.

당규상 시·도당 및 지역위원회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당무감사를 하게 돼 있으나 그간 코로나19 사태와 대통령 선거·지방선거 등으로 일정이 줄줄이 밀린 탓에 이번이 사실상 21대 국회 들어 처음이자 마지막 당무감사가 될 전망이다.

이번 당무감사 결과는 당 최고위원회에 보고되며, 감사에서 낮은 점수를 받거나 부정적 평가가 들어 가면 내년 공천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 현역 의원의 경우 이른바 컷오프(공천 배제) 등 기초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다.

국회=부미현기자

“제주특별법 개정안 등 제주 현안 협조를”

오영훈 지사,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에 협조 요청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15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과 분산에너지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오 지사는 15일 오후 국회에서 박 원내대표와의 면담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두 법안의 처리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오 지사는 “제왕적 도지사의 권한을 내려놓고 분권을 강화하겠다고 도민과 약속한 만큼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등을 공론화하려고 한다”며 “이번 상반기 중 제주특별법

개정이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이와 함께 제주가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역할을 해달라고도 덧붙였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제왕적 도지사의 권력을 내려놓고 풀뿌리 민주주의에 힘쓰고 도민을 섬기는 일을 하는 것에 박수를 보낸다”며 “에너지 문제는 제주도민뿐만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 적극 지원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국회=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친북 높음 그만하라, 안보가 시급하다」

- 사탄으로 추락한 제주교구 사제 37명은 사제로 인정할 수 없다! -

- 이 나라가 친북 정권이었을 때는 박수를 치며 쫓아가던 추종 세력들이 윤 정권이 들어서자 개 딸과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까지 끌어들여 빼앗긴 정권을 되찾고자 눈물겨운 투쟁을 벌이는 모습에 우리는 할 말을 잃고 있다.
- 「노동자를 탄압하는 윤 정권」이란 주장은 궤변이고 사기다!
- 우리는 양곡관리법을 반대했건만 그대들은 「농민과 노동자를 절망의 수렁으로 이끄는 윤 정권은 국민 앞에 반드시 무릎 꿇어야 한다」는 주장 또한 맹랑한 억지다.
- 윤 정부를 비난하고 퇴진을 요구하는 정의구현사제단 일원인 사탄 임문철은 신부라는 호칭을 거둬들인다.(임문철은 사제의 직무를 소홀히 하고 수십년 간 편향된 정치, 사회 활동을 하였음)
- 사제가 본연의 직무를 저버리고 그동안 반국가적이며 반교회적인 활동을 함으로써 도민으로부터 외면당하고, 또한 교회를 떠나는 신자들이 많아졌다. 신자 75%가 냉담하고 있으며, 25%만이 미사참례 한다는 현실을 절감하고, 정치사제(사탄)들은 제발 교회를 떠나주기를 바란다!!

2023년 5월 성모성월애

국가와 교회를 사랑하는 신자모임 (국교사)

연락처 (064)722-3356 / 후원계좌: 제주은행 700-100-123630 / 국교사

· 대표: 김창유 아우구스티노 · 간사: 홍석표 막시미노 · 자문위원: 김원을 안드레아 신학자 · 지도신부: 김계춘 도미니코 신부

국가와 교회를 사랑하는 신자모임(국교사)의 목적은 진실을 외면하고 거짓의 편에서 어느 정치조직에 편향된 주장을 하는 것을 배격합니다. 우리는 가톨릭교회의 교리서와 교회법을 준수하며 교회 사목자들이 정치구조에 개입하는 것을 반대합니다.